



2022 불평등해소실천지표

The Commitment to Reducing Inequality Index 2022

Jo Walker, Matthew Martin, Emma Seery, Nabil Abdo,
Anthony Kamande, Max Lawson



Development
Finance
Internation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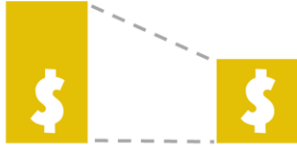


2022 불평등해소실천지표^{CR1}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세계 각국 정부가 취한 불평등 해소 정책 및 조치에 대한 최초의 세부적 연구 분석 출간 자료이다. 본 지표는 2020~2022년 기간 동안 세계 161개 정부의 지출과 조세, 노동 정책 및 실천에 대한 검토를 담고 있다.

코로나19는 전 세계적으로 불평등을 심화시켰으며 최빈곤층과 취약계층이 감염병과 치명적인 경제적 악영향의 피해를 가장 크게 겪고 있다. 2022 불평등해소실천지표는 대부분의 정부가 이토록 위험한 불평등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중요한 구체적 조치 이행에 실패했다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준다. 지난 100년 이래 최대 규모의 전 지구적 보건 비상상황을 겪고 있음에도 저소득 및 중저소득 국가 중 약 50%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보건 지출을 축소했으며, 조사 국가 중 약 50%는 사회보장 지출 비중을, 70%는 교육 지출 비중을 감축하였다. 최저임금 상승률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에 미치지 못하는 국가도 2/3에 달했다. 95%의 정부가 최상위 부유층 및 기업에 대한 세금을 인상하지 않은 반면, 전 세계 소수의 정부는 불평등 해소 정책 및 조치를 통해 불평등 해소 조치를 취하지 않은 대부분의 국가에게 부끄러움을 안겨주었다.

2022 불평등해소실천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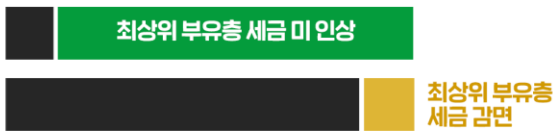
THE COMMITMENT TO REDUCING INEQUALITY INDEX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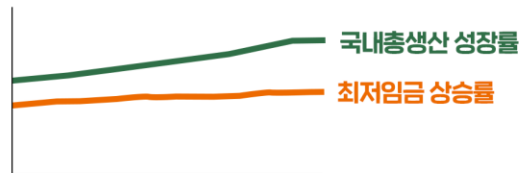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100년 이래 최악의 전 지구적 보건 비상상황에도 저소득 및 중저소득 국가 50%는 보건 지출을 삭감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극도의 빈곤이 만연함에도 조사 국가의 50%는 사회보장 지출 비중을, 70%는 교육 지출 비중을 축소했다.



코로나19 이후 최상위 부유층과 기업의 부가 크게 증가했음에도 161개국 중 143개국은 부유층 세금을 인상하지 않았고, 11개국은 감면했다.



조사 국가 2/3는 국내총생산 성장률에 미치지 못하는 최저임금 상승률을 기록했다.

2022 불평등해소실천지표 상위-하위권 및 순위 상승-하락 국가

상위 10개국		하위 10개국		순위 상승국		순위 하락국	
1	노르웨이	161	남수단	타지키스탄	+37	아프가니스탄	-36
2	독일	160	라이베리아	몰디브	+33	토고	-35
3	호주	159	나이지리아	부탄	+30	온두라스	-34
4	벨기에	158	아이티	몰도바	+29	예멘	-32
5	캐나다	157	기니	모로코	+29	가이아나	-28
6	일본	156	마다가스카르	싱가포르	+27	조지아	-27
7	덴마크	155	코트디부아르	이집트	+26	에스와티니	-26
8	뉴질랜드	154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모리셔스	+25	홍콩	-26
9	슬로베니아	153	시에라리온	대한민국	+22	볼리비아	-22
10	핀란드	152	우간다	팔레스타인 점령지역	+19	세이셸	-22

요약

2022 불평등해소실천지표: 코로나19 이후 심화된 불평등 해소를 위한 대부분 국가의 노력은 미약

불평등해소실천지표는 불평등 해소를 위한 노력에 따라 전 세계 161 개 정부의 순위를 산정하는 지표로서, 핵심 요소가 되는 3 가지 주요 부문인 사회적 지출, 조세, 노동에 대한 실적을 바탕으로 정부의 노력에 순위를 매겼다.

본 지표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2년간 세계 각국 정부가 취한 불평등 해소 정책 및 실천에 대한 최초의 세부적 연구 분석 출간 자료로 2020~2022년 기간 동안 세계 161개 정부의 지출, 조세, 노동 정책을 검토했고,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코로나19는 전 세계적으로 불평등을 심화시켰으며 최빈곤층과 취약계층이 감염병과 치명적인 경제적 악영향의 피해를 가장 크게 겪고 있다.¹ 2022 불평등해소실천지표는 대부분의 정부가 이토록 위험한 불평등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중요한 구체적 조치 이행에 실패했다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준다.

- 지난 100년 이래 최대 규모의 전 지구적 보건 비상상황을 겪고 있음에도 저소득 및 중저소득 국가 중 약 50%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보건 지출을 축소했다.
- 코로나19로 인한 극도의 빈곤이 만연하고 있음에도, 조사 국가 중 약 50%는 사회보장 지출 비중을, 70%는 교육 지출 비중을 축소했다.
-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세수가 대폭 감소함과 동시에 최상위 부유층 및 기업의 부가 크게 증가하였음에도 161개국 중 143개국은 이들에 대한 세금을 인상하지 않았으며, 11개국은 최상위 부유층 대상 세금을 감면하기까지 했다.
- 조사 국가 중 2/3는 국내총생산 성장률에 미치지 못하는 최저임금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와 동시에, 본 지표는 일부 정부가 전 소득 수준에 걸쳐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적 조치를 명확히 취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도 한다. 이러한 조치는 전 세계적으로 모범이 될만한 사례로서 불평등은 필연적 현상이 아니라 정책적 선택임을 입증하고, 불평등 해소 조치를 취하지 않는 대부분의 국가에게 부끄러움을 안겨준다. 주목할 만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

- 팔레스타인 점령지역^{The Occupied Palestinian Territory, OPT}은 불평등 해소를 위한 사회적 지출 예산 비중을 37%에서 47%로 늘렸으며, 네팔은 2019~2021년에 걸쳐 보건 지출을 50% 이상 확대했다.
- 코스타리카는 최상위 부유층에 대한 소득세율을 10%p 인상하였고, 아르헨티나와 볼리비아는 최상위 부유층을 대상으로 부유세와 연대세^{solidarity tax}를 도입했다.
- 바베이도스는 여성 노동권 향상을 위한 포괄적 법률을 도입했고, 몰디브는 최초로 전국적 최저 임금을 시행했다.

코로나 19 는 현재 생계비 위기로 인해 더욱 악화되고 있으며 이는 전 세계 일반 시민을 위협하고,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기근으로 몰아넣었으며, 각국 정부의 재정에 큰 타격을 주었다. 금리 상승과 미 달러화 강세는 이미 심각한 상태인 부채 위기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2021년 기준 저소득 및 중소득 국가들은 예산의 27.5%를 부채 상환에 사용했는데, 이는 교육 지출의 2 배, 보건 지출의 4 배, 사회보장 지출의 약 12 배에 달하는 규모이다. 금리가 1% 상승할 때마다 저소득 및 중소득 국가들이 부유한 채권자에게 상환해야 하는 이자는 350 억 달러씩 추가 증가한다.

세계는 코로나19 이전에도 이미 극도의 불평등을 겪고 있었으며 현재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각국 정부와 국제사회의 긴급 조치가 없는 한, 코로나19로 인한 심각한 불평등과 빈곤은 빠르게 영속화될 것이며 각국 정부는 위기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잃어버린 10년'을 겪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새로운 위기에 직면한 전 세계가 이미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는 본 지표에서 명확히 드러난 코로나 19 기간 중의 실패를 통해 신속하게 교훈을 얻어야 한다. 사회적 지출 감축이 아닌 확대 조치를 즉시 시행해야 한다.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최저 생활임금을 보장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최상위 부유층 및 기업의 세금을 크게 인상해야 한다. 정부가 현재의 폭발적인 불평등 악화를 저지하고 개선하려면 이러한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상황은 결코 필연이 아니다. 불평등은 정책적 선택의 결과이다. 일부 국가는 현재의 복합적 위기 상황에서도 '다른 길'로 가는 것이 가능하며, 더욱 평등한 사회로 향하는 길은 모든 국가가 택할 수 있는 실용적 대안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 그 어느 때보다 이러한 방향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

2022 불평등해소실천지표: 조사 방법론 및 결과

본 지표는 불평등 감소를 위한 실천을 바탕으로 전 세계 161개 정부의 순위를 산정하였다.² 불평등 감소에 핵심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입증된 주요 3부문 1) 공공서비스(보건, 교육, 사회보장), 2) 조세, 3) 노동권에 대한 정책과 조치를 측정하였다.³ 2020년 자료와 마찬가지로 각 핵심 부문은 3가지 세부지표인 1) 정책공약지표, 2) 정책공약의 적용범위 또는 실행지표, 3) 해당 정책이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지표를 포함하고 있다. 지표 산정 방법론 상에서의 차이는 없으며, 따라서 본 보고서는 2020년과 2022년 산정된 국가 순위와 정책적 변화, 특히 코로나19 전후 정책을 비교하는 데 초점을 둔다.⁴

그림 1: 불평등해소실천지표 산정 구조

	공공서비스 지출	조세 누진성	노동권 및 임금
정책공약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S1a 교육 • PS1b 보건의료 • PS1c 사회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1a 개인소득세(PIT) • T1a 법인세(CIT) • T1a 부가가치세(VAT) • T1b 유해조세제도(H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1a 노동권 • L1b 여성 노동권 • L1c 최저임금
적용범위 또는 실행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S2a 최빈곤층 5분위의 중등교육 이수율 • PS2b 보편적 의료보장 및 자기부담 의료비 지출 • PS2c 연금지급 대상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2 부가가치세, 개인소득세, 법인세 전반의 세수 생산성(tax productivit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2a 실업 • L2b 취약고용
영향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S3 지출이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지니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3 조세가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지니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3 노동소득(임금)이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지니계수)
불평등해소실천 총계	주요 3부문 점수의 평균		

주요 결과

최상위권 및 최하위권 국가

2020년과 마찬가지로 노르웨이가 불평등해소실천지표 1위를 기록했으며, 독일과 호주가 그 뒤를 이었다. 호주의 순위는 2020년 16위에서 2022년 3위로 대폭 상승했다. 불평등해소실천지표 상위 10개국은 모두 부유한 OECD 회원국이다. 부유한 국가는 고소득 시민과 기업이 많기 때문에 세수 확보 여력이 훨씬 더 크다는 점을 그 이유 중 하나로 들 수 있다. 이에 따라, 확보된 세수를 공공서비스와 사회보장에 지출할 수 있는 여력도 더욱 커지게 된다.

그러나 최상위권 국가들도 개선의 여지는 많다. 노르웨이는 공공서비스 부문에서 12위에 그쳤다. 대다수 OECD 국가보다 교육 및 보건 지출이 적었으며, 보편적 중등교육과 의료보장을 아직 실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한, 조세 부문에서도 15위를 차지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불평등 감소를 위해 식품에 부과된 높은 부가가치세에 대한 일시적 감면 조치를 시행했으나, 2000년대에 최상위 부유층 대상 개인 소득세율과 법인소득세율을 대폭 인하한 것이 영향을 주었다. 또한, 국내총생산 성장률에 못 미치는 최저임금 상승률로 인해 노동 부문 순위도 1위에서 3위로 하락했다. 독일의 경우, 노동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기록했고 최근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그러나 교육 지출은 여전히 낮으며, 부가가치세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호주의 급격한 순위 상승은 새롭게 도입된 강력한 조세회피방지 조치와 더불어 2022년 7월 시행된 최저임금 대폭 인상 조치가 반영된 것이다. 그러나 호주의 육아휴직은 기간과 급여 지급 면에서 충분하지 않은 수준이며, 노동 부문 순위는 40위에 그쳤다.

반면, 최하위권 국가는 모두 저소득 국가였으며 대다수가 현재 혹은 최근 지속된 내부 갈등과 정치적 불안으로 인해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다. 남수단은 2020년에 이어 올해도 최하위를 기록했으며, 나이지리아가 그보다 한 단계 높았다. 남수단과 나이지리아 모두 3가지 핵심 부문에서 전체적으로 낮은 점수를 보였지만, 나이지리아의 경우 소상공인을 부가가치세 납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조세 부문에서 약간의 개선이 있었다. 기니와 시에라리온은 법인소득세 인하 조치로 인해 새롭게 하위 10위권 아래로 순위가 내려갔다. 우간다는 사회적 지출 비중의 대폭 하락, 코트디부아르는 세수 생산성 감소로 인해 하위권을 차지했다.

표 1.0. 불평등해소실천지표 상위-하위권 및 순위 상승-하락 국가

상위 10 개국		하위 10 개국		순위 상승국		순위 하락국	
1	노르웨이	161	남수단	타지키스탄	+37	아프가니스탄	-36
2	독일	160	라이베리아	몰디브	+33	토고	-35
3	호주	159	나이지리아	부탄	+30	온두라스	-34
4	벨기에	158	아이티	몰도바	+29	예멘	-32
5	캐나다	157	기니	모로코	+29	가이아나	-28
6	일본	156	마다가스카르	싱가포르	+27	조지아	-27
7	덴마크	155	코트디부아르	이집트	+26	에스와티니	-26
8	뉴질랜드	154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모리셔스	+25	홍콩	-26
9	슬로베니아	153	시에라리온	대한민국	+22	볼리비아	-22
10	핀란드	152	우간다	팔레스타인 점령지역	+19	세이셸	-22

순위 상승 및 하락 국가의 경우, 다양한 소득 수준의 국가들이 고르게 포진되어 순위 상위 및 하위권 국가들과는 사뭇 다른 양상을 보였다. 이는 어떤 국가든지 불평등 해소 정책 시행을 통해 지표가 현저하게 개선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증명한다. 순위 상승국 중에는 저소득국 1개국(타지키스탄)과 중저소득국 4개국(몰도바, 부탄, 팔레스타인 점령지역, 이집트)이 포함되어 있다. 타지키스탄은 개인소득세 수입 대폭 증가, 몰도바는 남성을 포함한 육아휴직 확대 및 실업/취약고용 감소, 부탄은 역진적 성격의 판매세 대신 상대적으로 중립적 성격의 부가가치세 시행 및 최상위 부유층의 개인소득세율 인상, 팔레스타인 점령지역은 사회적 지출 및 최저임금 대폭 인상, 이집트는 최초의 국가 최저임금 도입이 순위에 영향을 미쳤다. 또한, 몰디브가 새롭게 도입한 누진소득세, 대한민국이 최근 시행한 사회적 지출 증가 및 연금 지급 대상 확대도 불평등 해소를 위한 중요한 정책적 변화였다.⁵

순위 하락국 중에는 고소득 국가 1개국(세이셸)과 1개 지역(홍콩), 중상소득국 2개국(조지아, 가이아나)이 포함되어 있다. 하락 규모 상위 10개 국가 및 지역 중 8개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세수 급감이 순위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코로나19와는 별개로 핵심적 정책 변화로 인한 불평등 악화도 순위 하락에 작용했으며, 이러한 사례로는 여성 노동권이 급격히 악화된 아프가니스탄, 2012년부터 현재까지 최저임금 인상이 시행되지 않은 토고, 그리고 사회적 지출 예산 비중 및 이로 인한 공공서비스 적용범위 감소가 발생한 에스와티니, 온두라스, 세이셸, 홍콩 등을 들 수 있다. 이 외에도 핵심 정책 변화로 인한 불평등 심화 또한 주 요인이 되었다. 특히, 홍콩을 제외하고 사회적 지출 예산 비중이 감소한 국가들은 채무 상환액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사회적 지출 자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

박스 1: 불평등 해소 모범 및 실패 사례

순위 상승국

팔레스타인 점령지역^{OPR}은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도 지난 조사 대비 19계단 상승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의 총 지출 중 보건 예산 비중은 약 1/3 증가, 사회보장 예산 비중은 50% 이상, 교육 예산 비중은 10% 이상 증가했다. 최근 몇 년간 소득의 10% 이상을 의료비로 지출하는 시민의 비율이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또한 10년 만에 처음으로 1인당 국내총생산의 33%에 해당하는 최저임금 인상을 단행했다.

대한민국은 올해 지표에서 22계단 올라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비율로 최빈곤층 어린이가 10명 중 9명이 중등교육을 이수하는 등 공공서비스 지출을 개선하고 서비스 적용범위를 확대했으며, 재난적 의료비 지출을 45% 줄였다. 코로나19 팬데믹 초기 단계에 최상위 부유층 대상 세금을 인상하고, 주요 조세피난처 등을 이용한 조세회피를 막았다. 이번 개선은 이전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새 정부가 이를 이어갈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다.

세네갈은 올해 지표에서 10계단 상승했다. 교육 예산의 비중은 1/5, 사회보장 예산의 비중은 1/3 증가했으며, 서아프리카 국가 중 불평등 해소를 위한 공공서비스 지출이 가장 컸다. 그러나 의료비 지출은 예산의 5%로 여전히 매우 낮은 수준이다. 최상위 부유층에 대한 세율이 40%인 세네갈은 서아프리카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인 국가 중 하나이며, 세금 면제를 없애고 탈세 방지를 통해 세금 징수를 12% 늘렸다.

마키 살 세네갈 대통령은 2022년 9월 대국민 연설에서 건강, 교육, 위생 등 특히 공공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여 사회적, 경제적, 지리적 불평등을 줄이겠다는 정치적 의지와 약속을 다시 밝혔다. 그의 세 번째 임기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 국민을 달래기 위한 발표가 아닌 결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순위 하락국

불가리아는 올해 지표에서 20계단 하락해 3가지 주요 부문에서 모두 순위가 내려갔다. 불가리아의 조세 정책은 세계에서 역진성이 가장 높은 사례 중 하나이다. 부유층과 법인의 소득세율은 10%에 불과하지만 부가가치세율은 2배 이상 높고, 이를 개선할 방안도 찾기 어렵다. 불가리아에서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소득세율이 적용된다. 최근 사회보장 예산 비중이 약간 삭감되었으며, 재난적 의료비 지출 비중은 3/4 증가해 세계에서 9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최저임금은 국내총생산 대비 1/10으로 하락해 88위에 그쳤다.

현재 정치경제적 격변 상황에 처해 있는 스리랑카는 이번 지표에서 17계단 하락한 순위를 차지했다. 공공서비스 지출 부문에서 하위 여섯 번째를 기록했으며, 이미 낮은 수준인 보건교육 예산 비중을 2019년부터 매년 1/5 감축하고 있다. 스리랑카는 최근 몇 년간의 세율 인하 및 대규모 사업에 대한 면세 조치로 인해 확보 대상 세수 중 16%만이 실제로 징수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빈곤인구는 27% 증가했다.

경제적 혼란과 부채 위기에 처한 가나는 올해 지표에서 7계단 하락했으며, 공공서비스 부문에서는 25계단 하락한 순위를 기록했다. 이미 세계 최하위권인 교육, 보건, 사회보장 관련 예산의 비중은 부채 상환 증가로 인해 대폭 삭감됐다. 2022년, 국가적 부채 위기를 직면하면서 공공서비스 및 사회보장에 대한 투자를 방해하는 많은 긴축 조치가 발표되었다.⁶ 이로 인해 약 1,700만 명은 가장 기본적인 의료서비스조차 보장받을 수 없으며, 최저임금은 국내총생산 대비 1/10 수준으로 떨어졌다. 가나는 올해 지표에서 130위를 기록하고 노동 부문은 133위에 그쳤다.

주요 부문 지표 측정 결과

주요 부문 1: 공공서비스 - 코로나 19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보건 및 사회 보장 지출 비중 감소

불평등해소실천지표 중 공공서비스 부문은 공교육, 보건, 사회보장 서비스를 통한 정부의 불평등 해소 조치를 측정한다. 2020년과 마찬가지로, 본 부문에서는 정부 예산 대비 공공서비스 지출 비중, 공공서비스 적용범위 및 형평성, 공공서비스 지출이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살펴본다.

공공서비스 부문 주요 결과

공공서비스 부문에서 상위를 차지한 20개국은 모두 고소득 국가이다. 1위를 기록한 폴란드는 최빈곤층에게 그들의 시장소득과 동등한 금액을 공공서비스를 통해 제공했다. 전쟁 발발 이전 우크라이나는 교육 및 보건 지출을 크게 늘려 24위에서 21위로 순위가 상승했고, 중저소득 국가도 불평등 해소를 위한 공공서비스 측면에서 최상위 소득 국가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했다. 또한, 상대적 저소득 2개국도 지난 지표 발표 이후 순위가 크게 개선되었다. 팔레스타인 점령지역은 사회보장 지출과 연금 지급 대상을 대폭 확대했으며, 모잠비크는 2019년부터 교육 지출을 크게 늘려 공공서비스 주요 부문에서 저소득국 중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공공서비스 부문의 최하위권에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예산 비중, 공공서비스의 적용범위, 공공서비스 지출이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측면에서 낮은 성과를 낸 저소득 국가들이 자리했다. 최하위를 기록한 남수단은 2019년부터 교육 지출 비중을 축소해 왔다. 가나, 온두라스, 에스와티니, 세이셸은 채무 부담 증가 및 긴축 정책으로 인한 공공서비스 지출이 감소하여 순위가 크게 하락했다.

코로나 19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공공서비스 예산 지출 비중 감소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대부분의 정부가 보건 및 사회보장을 위한 핵심적 지출 예산 비중을 기존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조차 실패했다는 사실은 시민을 보호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이 공약에 불과했음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이와 달리 올바른 정책을 시행하고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시민을 지원하기 위한 공공 지출 증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 국가들은 모범 사례가 되고 있다.

코로나19 기간 중 측정된 각국의 교육, 보건, 사회보장 예산 총합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적으로 1%p 하락했다. 50% 이상의 국가가 해당 예산의 비중을 축소했으며, 5%p 이상 확대한 국가는 19개국에 불과했다. 1위를 기록한 코스타리카는 교육, 보건, 사회보장 부문에 총예산의 67%를 지출했으며, 이란, 우즈베키스탄, 아르헨티나, 몰도바 또한 고소득 국가가 아님에도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최하위권에는 불평등 해소 노력이 미약한 저소득 국가들이 자리했다. 특히, 남아시아 4개국 중 우간다, 기니 비사우는 공공서비스 부문 지출을 대폭 감축하면서 하위 10위 아래로 순위가 내려갔다. 충격적인 사실은, 저소득 및 중저소득 국가 중 거의 절반(49%)이 코로나19로 인한 전 지구적 보건 비상상황에도 불구하고 보건 부문 예산 비중을 축소했다는 것이다. 전 세계 국가 중 2/3 이상이 교육 예산 비중을, 약 50%는 사회보장 예산 비중을 줄였다.

부르키나파소, 부룬디, 에티오피아, 르완다 등 저소득 국가는 교육 예산 비중 확대에 성공했다. 사이프러스, 몰디브, 중앙아프리카공화국은 보건 예산 비중을 대폭 늘렸으며, 중국, 우즈베키스탄, 몽골은 사회보장 지출 비중을 대폭 늘렸다.

공공서비스 적용범위는 코로나 19 전에도 거의 개선 없었음

코로나19 이전에도 최빈곤층 대상 공공서비스 측면에서는 사실상 거의 진전이 없었다. 지난 지표 발표 이후 교육, 보건, 사회보장 적용범위는 매년 0.5%p에도 미치지 못하는 개선을 보였다. 코로나19 이전 기준으로 최빈곤층 아동의 중등교육 이수율이 10% 미만을 기록한 국가가 40개국, 보건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인구가 전체 50%를 초과하는 국가가 35개국, 소득 중 감당하기 어려운 비중의 보건 비용을 지출하는 인구가 전체 10%를 초과하는 국가가 51개국, 노년층 중 연금 수령 인구가 절반 미만인 국가가 66개국에 달했다.

상대적 빈곤 국가의 경우, 예산 중 공공서비스 지출 비중이 높더라도 1인당 지출 금액은 미미하여 최빈곤층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자주 있다. 2020~21년 기간 중 공공서비스 지출 감소는 이러한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 그러나 일부 국가는 공공서비스 적용범위를 확대하면서 좋은 모범 사례가 되었다. 아르헨티나, 아르메니아, 몽골은 교육 부문에서, 태국과 엘살바도르는 보건서비스 적용범위에서, 피지, 멕시코, 사모아, 튀니지는 연금 지급 대상 면에서 개선된 모습을 보였다.

공공서비스 지출이 불평등 해소에 미치는 영향 다소 증가

지난 지표와 마찬가지로, 공공서비스 지출의 영향 면에서 상위권을 차지한 대부분의 국가는 폴란드를 비롯한 고소득 국가였다. 폴란드는 공공서비스를 통해 불평등을 77% 감소시켰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와 키리바시는 공공서비스를 통한 불평등 해소 면에서 상대적 저소득 국가 중 탁월한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최하위권을 살펴보면, 남수단의 공공 지출이 불평등 해소에 미친 영향은 0.5%p에 그쳤으며, 남수단보다 소득이 높은 홍콩, 요르단, 바베이도스는 공공서비스의 불평등 해소 영향 면에서 미약한 성과를 보였다.

박스 2: 우크라이나 - 전쟁으로 인한 불평등 해소 성과 후퇴

우크라이나는 공공서비스를 통한 불평등 해소 면에서 가장 큰 성과를 거둔 중저소득 국가 중 하나였다. 대부분의 구소련 국가와 마찬가지로 우크라이나는 탄탄한 복지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전쟁 발발 이전 교육, 보건, 사회보장 예산 총합이 전체 예산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0%에 달해 고소득 국가들을 제외하고 6번째로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사회보장만 보더라도 지출의 35%를 차지했다. 이러한 높은 공공서비스 지출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 러시아 침공 이전, 기본 보건 및 사회보장 적용범위는 증가 추세에 있었으며, 아동, 신생아와 어머니, 중증 장애인에게 보편적 사회보장이 제공되었다. 거의 완전한 보편 노령연금이 시행되었으며, 실업인구 중 84%가 사회복지 프로그램 대상에 포함되었다.⁷ 전쟁 이전 우크라이나 국민 중 기본적인 의료보장 혜택을 받는 비율은 약 3/4에 달하며 중저소득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또한 우크라이나는 세수 확보 면에서도 탁월한 성과를 거두었다. 잠재적 세수 중 총 57.5%를 징수하여 불평등해소실천지표 평가 대상 161개국 중 10위를 기록했다. 그러나 역진성이 매우 높은 조세제도는 불평등 심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부가가치세율이 20%인 반면, 최상위 개인소득세율 및 법인세율은 세계 최저 수준인 18%에 불과하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은 파괴적인 경제사회적 영향을 유발하여, 사회서비스와 공공 재정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을 뿐 아니라 빈곤과 불평등 해소 면에서도 그간 이룩한 성과가 불과 몇 개월 사이에 후퇴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같이 암울한 상황은 세계은행, 우크라이나 정부, 유럽위원회가 공동 작성한 보고서에 반영되었다.⁸ 하루에 5.5 달러 미만으로 생활하는 인구의 비율인 빈곤율은 전쟁 이전 2%에서 21%로 급증하였고, 2023년에는 58%까지 치솟아 1,800만에 달하는 우크라이나 국민이 빈곤선 미만으로 생활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되고 있다. 전쟁으로 파괴된 교육, 보건, 사회보장 인프라 복구에는 450억 달러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쟁으로 인해 우크라이나의 세수는 급감한 반면 전쟁 관련 지출은 급증했다. 2022년 5월, 세수 확보 규모는 전쟁 이전 대비 27% 낮은 수준이나 지출은 40% 증가했으며, 지출 증가분 중 61%는 군사비 지출이 차지했다. 전쟁이 길어질수록 빈곤 확대, 생활 수준 하락, 인명 손실과 더불어 전쟁 후 재건 비용도 더욱 증가할 것이다.

불평등 해소 관련 지출의 평균 효과 추정치는 이전 지표 대비 18.4%에서 19.4%로 소폭 상승했다. 이는 두 가지 요인을 반영한다. 전반적으로 총 예산 대비 사회적 지출의 비중이 하락한 경우도 있었지만, 국내총생산과 국민소득의 하락폭이 더욱 컸기 때문에 국내총생산 또는 소득 대비 사회적 지출의 비중은 축소되지 않았다. 또한, 일부 국가의 경우 새로운 연구 또는 모델링 방법론을 도입하면서 추정치가 상승하는 결과가 발생했다. 2020년 지표 발표 이후 급상승을 보인 국가로는 국내총생산 대비 공공서비스 지출 비중 증가가 반영된 몰디브, 동티모르, 사이프러스를 비롯해, Commitment to Equity 연구소 및 OECD의 새로운 연구 결과가 반영된 남아프리카공화국, 튀르키예, 잠비아, 중국 등이 있다. 반면 세이셸, 키르기스스탄, 예멘, 지부티 등은 국내총생산보다 더 급격한 하락폭을 보인 공공서비스 지출 감소로 인해 순위가 크게 하락했다.

주요 부문 2: 누진적 조세제도 - 최상위 부유층의 부는 급격히 증가했지만 각국의 최상위 부유층 대상 조세부과 증가는 실패

본 지표의 조세 부문은 정책(주요 조세가 불평등 해소를 목적으로 설계되었는지), 실행(조세가 성공적으로 징수되었는지) 및 정책과 실행을 모두 고려할 때 불평등에 끼친 영향을 살펴본다. 아울러 국가들이 유

해조세제도^{HTP}를 통한 조세피난처와 같은 정책을 시행하여 자국 및 타국의 세수를 잠식하고 있는지 여부도 검토한다.

과거 사례를 보면, 역사적 위기가 직면했을 때 사회적 결속력이 강화되면서 정부는 사회적 연대 실현을 위한 명확한 조치의 일환으로 최상위 부유층에 대한 세금을 인상했다. 제 2 차 세계대전 기간 중 미국은 전쟁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최상위 부유층 세율을 90% 이상으로 끌어올렸으며, 전쟁으로 인한 기업의 횡재이익(windfall profit)에도 세금을 부과했다.

코로나 19 로 경제 활동이 중단되면서 판매세를 통한 세수가 대폭 축소되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최상위 부유층의 부는 전 세계적으로 크게 확대되었으며 기업의 이익 또한 급증했다. 억만장자들의 부는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였다. 그러나 조사 대상 161 개 정부 중 절대다수에 해당하는 143 개 정부가 코로나 19 기간 중 최상위 부유층 대상 세율 인상에 실패했으며, 심지어 11 개국은 최상위 부유층에 대한 감세를 시행했다. 올바른 정책 실행을 통해 사회 전체가 코로나 19 와 그 경제적 영향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유층 대상 세금을 인상한 국가는 7 개국에 불과했다.

조세 부문 주요 결과

조세 부문 지표에서 1위를 기록한 국가는 호주로, 제도적 누진성이 반영된 조세제도와 코로나19 기간 중에도 높은 수준의 세수 확보, 조세제도 및 그 실행이 불평등 해소에 끼친 큰 영향이 순위 상승에 기여했다. 2020년 이후 조세피난처에 해당하는 관행을 폐지한 점 또한 긍정적으로 반영되었다. 다만, 소상공인의 부가가치세 납부 면제, 현재 시행 중인 법인소득세율 감면 폐지, 고소득자 및 기업에 대한 면세 혜택 축소, 부유세 도입 등을 통해 불평등을 줄일 수 있는 여지는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 최하위권은 대부분 북마케도니아, 바하마, 바누아투, 바레인, 오만 등 소득세가 전혀 없거나, 매우 낮은 수준의 고정 소득세율이 적용되거나, 유해조세제도와 관련하여 낮은 점수를 받은 국가가 차지했다.

지난 지표 이후, 순위 개선국의 대부분은 특정 유해조세제도를 폐지했지만 2개 국가의 사례는 특히 주목할 만하다. 부탄은 전면적 세제 개혁을 통해 부가가치세를 보다 중립적으로 적용하고, 개인소득세의 누진성 개선 조치를 통해 세수 증가를 실현했다. 몰디브의 경우 누진적 개인소득세를 신규 도입했다. 순위가 대폭 하락한 국가 중 여러 곳은 코로나19, 무력분쟁, 유가 하락 등의 요소가 반영되었다. 그러나 최상위 부유층에 대한 세금 감면을 시행한 국가는 11개국, 법인세를 감면한 국가는 22개국에 그쳤다.

개인소득세 누진성 개선 및 부유세 신규 도입 이뤄낸 반면, 법인소득세율 감면 가속화
제도적으로 가장 누진적인 세제를 시행하는 국가들은 여전히 상대적 저소득 국가들이다. 코로나19 기간 중 앙골라, 코스타리카, 뉴질랜드를 필두로 21개국 이 최상위 부유층의 개인소득세를 인상했다. 몰디브가 누진적 개인소득세를 신규 도입함에 따라, 개인소득세 제도가 없는 국가는 4개국으로 감소했다. 또 하나의 긍정적 측면은 불평등 반대 시위와 새로운 진보 정부 출범에 따라 부유세 도입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아르헨티나와 볼리비아는 현재 부유세를 도입했으며, 칠레는 도입 계획 중이다. 그러나, 최상위 부유층의 부와 소득이 급증했음에도 조사 대상 161개국 중 143개국은 최상위 부유층 세율 인상에 실패했으며, 아르메니아, 바베이도스, 크로아티아를 비롯해 11개국은 심지어 최상위 부유층에 대한 감세를 시행했다.

한편, 평균 법인소득세율은 0.4%p 하락했으며, 22개국(특히 튀니지, 그리스, 앙골라, 필리핀, 시에라리온)이 법인세율을 인하한 반면, 인상한 국가는 5개국에 그쳤다. 가장 높은 법인소득세율을 적용한 국가 중 대부분은 여전히 저소득 및 중저소득 국가였다. 바하마, 바레인, 바누아투는 여전히 법인소득세를 도입하지 않고 있다. 일반적으로 역진적 성격을 띠며 이에 따라 불평등을 악화시키는 부가가치세 관련 변화는 거의 없었다. 아프가니스탄과 부탄은 식품과 소상공인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면제 조치를 통해 부가가치세의 역진성을 감소시켰다. 알바니아와 자메이카는 부가가치세의 역진성이 감소되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정한 반면, 앙골라와 일본은 부가가치세의 역진성이 증가했다. 전 세계 평균 부가가치세율은 15.7%에서 15.6%으로 하락했다.

유해조세제도는 감소하고 있으나 국가 간 소득 이전은 개선되지 않음

불평등해소실천지표는 국가가 유해조세제도 시행을 통해 기업 소득을 유인하고 타국의 세원^{tax base}과 불평등 해소 역량을 잠식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부정적 세부 지표표를 포함하고 있다. 2020년 이후 유해조세제도 관련 세부 지표에서 현저한 개선이 있었다. 유해조세제도를 전혀 시행하지 않는 국가의 수는 26개국에서 29개국으로 증가했으며, 글로벌 평균 점수도 최저점 9점 기준 1.7점에서 1.4점으로 개선되었다. 홍콩이 유해조세제도 관련 지표에서 최하위를 기록했고, 바베이도스와 싱가포르가 각각 뒤에서 2, 3위를 차지했다. 최하위 10위권 국가 중 EU 회원국 5개국(사이프러스,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이 포함되었다.

그러나 본 세부 지표는 가장 가시적인 유해조세제도만 반영한 것이며, 로열티, 이자, 배당금 이동을 추적하는 하위 세부 지표에 따르면 국가 간 소득 이전^{profit shifting}은 증가하고 있다. 최저세율 15% 적용 협정을 통한 유해조세제도 퇴치 노력이 OECD 회원국 세수 확보에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저소득 및 중저소득 국가의 혜택은 미약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국가들은 3개국(홍콩, 바베이도스, 싱가포르)을 제외하고 이미 모두 15% 이상의 법인소득세율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세수 확보 급감

팬데믹으로 인한 세수 확보 규모의 감소는 국내총생산 감소보다도 더욱 큰 규모로 발생하여 조세 '생산성'이 6.3% 하락했다. 조세 생산성은 확보 대상 세수 대비 실제 확보된 세수의 비중으로서, 각 국가의 규정 세율을 기반으로 계산된다. 전체적으로 부가가치세 확보액이 크게 감소하였고, 이로 인해 국가 조세제도의 역진성이 감소하는 결과를 보였다. 각국의 조세제도는 매우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영향을 받았으며, 가장 큰 순위 하락을 기록한 국가들도 서로 다른 요소로 인해 타격을 입었다. 아프가니스탄, 가이아나, 아이티, 레바논은 정치 불안이 큰 영향을 끼친 반면, 알제리, 볼리비아, 콩고공화국은 석유 및 가스 가격 하락으로 인해 큰 타격을 받았다. 한편, 부탄은 세제 개혁을 통해 조세 생산성이 크게 상승한 국가로서 모범 사례가 되었다.

세수 확보 감소를 보인 국가 중, 확보 대상 세수 대비 실제 확보 세수 비중이 2/3를 초과하는 최상위권 국가는 바베이도스, 몽골, 뉴질랜드, 불가리아, 덴마크, 세이셸 등이었다. 확보 대상 세수 대비 실제 확보 세수 비중이 10% 미만인 최하위권 국가는 남수단, 오만,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나이지리아, 차드, 레바논, 니비사우 등이었다.

조세제도는 불평등 심화 속도를 감소시키는 추세로 변화

평균적으로 세계 각국의 조세제도는 역진성을 유지하며 1.5%의 불평등 심화 효과를 유발했다. 이는 다수 국가에서의 높은 부가가치세 의존도와 매우 낮은 수준의 누진적 소득세 징수가 반영된 것으로, 97개국은 역진적 조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다만, 긍정적인 측면은 조세제도의 누진성이 강화된 국가는 58개국에 그쳤으나, 정책 변화와 전체 세수 중 부가가치세 비중 감소로 인해 코로나19 기간 중 조세제도의 역진성이 감소한 국가는 96개국에 달했다.

Commitment to Equity 연구소와 OECD의 최근 분석 자료에 따르면, 조세제도의 소득 불평등 해소 추세가 가장 뚜렷한 국가는 아일랜드, 케냐, 탄자니아, 레소토, 아르헨티나이다. 이들 국가는 모두 조세제도를 활용하여 5%를 훨씬 상회하는 수준의 불평등 감소를 실현했으며, 이는 누진적 소득세 구조 및 효과적인 소득세 징수를 통해 이뤄졌다. 반대로, 조세제도의 소득 불평등 심화 추세가 가장 뚜렷한 국가는 세르비아와 불가리아를 비롯해 동유럽 및 중앙아시아 국가들로서, 낮은 수준의 고정 소득세율을 적용하고 간접세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였다.

주요 부문 3: 노동권 - 코로나 19 기간 중 최저임금 인상은 제대로 실행되지 않았으나, 여성 권리는 개선

본 지표의 노동 부문은 노동권 관련 정책(노동3권 존중, 여성노동자에 대한 법적 보호, 최저 임금), 노동권의 적용범위(실업자 및 취약고용 노동자), 노동권 및 관련 정책의 영향(노동소득의 지니계수로 측정)을 평가한다.

코로나19는 전 세계 저임금 노동자, 특히 여성에게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끼쳤으며, 수억 명에 달하는 인구가 기근 상황에 내몰렸다. 부유국들은 노동자 지원을 위한 사회보장과 기업 보조금에 수십 억 달러를 지출하며 실업률을 낮은 수준으로 유지했으나, 대다수의 저소득 및 중저소득 국가들은 이러한 정책을 추진할 여력이 없었다.

한편, 이번 지표는 코로나 19로 인해 노동권이 더욱 침해되는 결과가 발생했다는 점을 보여준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국내총생산 성장률에 미치지 못하는 국가가 2/3에 달했으며, 국제노동조합총연맹(ILO)에 따르면 코로나 19로 인해 노동 3권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한 가지 긍정적인 측면은 여성 권리 증진을 위한 새로운 법률이 지속적으로 도입되고 있다는 점이다.

노동 부문 주요 결과

노동 부문의 상위 10개국은 슬로바키아를 비롯해 모두 고소득 유럽 국가이며, 강력한 노동 정책, 낮은 수준의 실업 및 취약고용⁹, 낮은 수준의 임금 불평등이 반영되었다. 반면, 하위 10개국은 최하위를 기록한 나이지리아를 비롯해 모두 상대적 저소득 국가인 아프리카 국가로서, 매우 높은 수준의 취약고용과 노동권이 낮은 순위의 원인이 되었다. 2020년 이후 가장 큰 순위 상승을 보인 3개국은 여성 권리 향상 및 취약고용 감소를 이룬 몰도바,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한 팔레스타인 점령지역, 공공 부문에서 시행하던 최저임금을 전 부문으로 확대한 이집트였다. 순위가 하락한 국가들은 모두 코로나19로 인한 실업 및 취약고용 증가, 소득 불평등 확대의 영향을 받았다.

노동 정책 - 여성 권리에 관한 제도적 개선은 있었으나, 최저임금 인상은 제대로 실행되지 않음

모든 노동 관련 정책 중, 여성의 권리와 최저임금 측면에서 괄목할 만한 개선이 있었다. 2020년 지표 발표 대비 가장 큰 순위 상승을 실현한 3개국은 직장 내 여성 보호를 위한 포괄적 법률을 시행한 바베이도스, 사모아, 그리고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한 중앙아프리카공화국이었다. 네팔은 육아 휴직을 크게 확대했으며, 앙골라, 아이티, 자메이카는 성희롱 방지법을 도입했다. 낮은 점수를 기록한 국가들은 대부분 최저임금 인상률이 국내총생산 성장률에 미치지 못한 국가들이었다.

노동 3권이 위협받는 상황

노동3권 관련 세부 지표의 근거 자료는 아직 조사 중인 관계로 지표 상의 점수는 2020년도 자료를 그대로 반영했으며, 대신 최신 정보 제공을 위해 국제노동조합총연맹의 분석을 참고했다. 데이터에 따르면 코로나19 기간 중 노동자 권리에 대한 억압이 증가했고, 87%의 국가에서 파업권, 79%의 국가에서 단체교섭권, 74%의 국가에서 노동조합 결성 및 가입권 침해가 발생했다. 노동3권 존중 수준이 가장 높은 국가는 오스트리아, 덴마크, 핀란드, 독일,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우루과이였다. 가장 낮은 국가는 방글라데시, 벨라루스, 브라질, 이집트, 온두라스, 미얀마, 필리핀, 튀르키예, 짐바브웨였다.

여성 권리는 제도적으로 크게 개선되었고, 실제 이행이 시급한 과제

직장 내 여성 권리(남녀 동일임금, 강간·성희롱·차별 금지, 육아휴직 관련 입법)에 관한 지표는 2020년 이후 큰 개선이 있었다. 개선의 결과로 현재 154개국이 차별방지법을 시행 중이며, 145개국은 남녀 동일임금, 137개국은 성희롱 방지 관련 법률을 적용하고 있다. 높은 수준의 남녀 임금 격차와 성희롱 불처

별 문제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점은 해당 부문에 대한 법률 집행이 최우선 과제임을 입증한다. 반면, 강간 관련 법률에 부부간간을 포함시키고, 폭력 행사의 입증에 아닌 동의의 부재를 강간의 근거로 채택하기 위한 개선은 실질적으로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주목할 만한 사례로는 여성 권리 관련 법률을 전반적으로 개선한 바베이도스와 그 대척점에서 여성에 대한 법률적 보호가 붕괴된 아프가니스탄을 들 수 있다.

육아휴직 정책에서도 개선이 있었다. 17개국에서 육아휴직 또는 남성 육아휴직을 신규 도입 또는 확대하였고, 8개국에서는 여성 육아휴직을 신규 도입 또는 확대했다. 특히 EU 국가들은 일·생활균형 규정 준수를 위한 긍정적 조치를 시행하며 두드러진 성과를 보였다. 반면, 5개 국가에서는 여전히 유급 육아휴직을 도입하지 않고 있으며, 58개 국가의 여성 육아휴직 기간은 국제노동기구가 권고한 14주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은 코로나 19 기간 중 중단됐으나, 그 이후 가속화

코로나19는 여러 국가에서 최저임금 인상 거부의 구실로 이용되었으며, 이로 인해 1인당 국내총생산 대비 임금의 비율은 2019~2022년에 걸쳐 50%에서 47%로 하락했다. 12개 국가에서는 국가 최저임금이 시행되지 않고 있으며, 인도는 국가 최저임금제 붕괴로 인해 미시행국 목록에 새롭게 포함되었다. 아울러, 다수 국가는 국내총생산 성장률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 인상을 기록했다. 방글라데시, 부룬디, 조지아, 르완다, 우간다, 짐바브웨의 경우 임금이 1인당 국내총생산의 10% 미만에 그쳤다. 2022년에는 여러 국가에서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기 시작했으며, 그중 팔레스타인 점령지역과 모잠비크가 가장 높은 인상을 보였다. 또한 다수의 EU 회원국 및 EU 가입후보국은 '양호한 생활수준^{decent standard of living}' 규정에 부합하는 임금 인상을 시행했다.

노동권의 적용범위

이전 보고서에서 강조된 바와 마찬가지로, 최빈곤 국가들의 노동권 이행은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는 표준계약에 기반하지 않고 비공식적으로 고용된 노동자들과 관련이 있다. 조사 대상 국가들의 전반적 실업률은 2020년 7%에서 2022년 8.2%로 증가했으며, 특히 콩고공화국, 남아프리카공화국, 파나마, 레바논에서 급증세를 보였다. 취약 노동자의 평균 비중은 코로나19 기간 중 37.3%에서 36.5%로 소폭 하락했으나, 일부 국가에서는 급격한 상승이 있었다. 레소토의 경우 취약 노동인구 비율이 16%에서 52%로 가파르게 증가했다. 반면, 타지키스탄과 몰도바는 공식 고용 증진, 비공식 고용에 대한 규제 강화, 규정 준수를 위한 기업의 공식 등록 비용 인하, 고용주 상대 협상력 증대를 위한 정책 시행을 통해 취약 노동인구 비율을 크게 감소시켰다. 덧붙여, 코로나19 기간 동안 OECD 국가 노동자 1,400만 명, 특히 빈곤 노동자가 실업자로 등록되지 않고 '비(非)경제활동상태'가 되며 노동권을 상실했다.

영향: 임금 불평등은 여전히 매우 높은 수준이며, 특히 저소득 국가는 심각한 상황

노동 정책과 그 적용범위는 부유층과 빈곤층 간의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한 목적성을 가진다. 이러한 목적성은 주로 고소득 OECD 회원국에서 실현되고 있으며, 이는 노동자의 권리가 명목상 존재할 뿐 아니라 대부분의 노동자에게 실제로, 구속력 있는 방식으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반면, 라이베리아, 니제르,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짐바브웨, 콩고민주공화국 등 7개 국가에서는 극도로 높은 임금 불평등(지니계수 0.8 이상)이 나타났다. 이는 노동자의 권리가 미약하게 적용되는 수준이며, 노동권이 없는 취약고용 또는 실업 노동자가 많은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또한, 국민 소득 중 임금, 급여, 복리후생 등 노동 소득이 전반적으로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 이래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유럽과 북미에서 이러한 추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노동 소득과 달리 배당금과 이자 및 이윤 등의 자본 소득은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소득은 부유층에게 혜택을 부여하고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결론 및 제언

코로나 19 팬데믹과 그에 따른 보건, 사회, 경제 위기로 인해 빈곤과 불평등이 크게 악화되었다. 전 세계적으로 수십 년 만에 최초로 빈곤이 급증하는 모습이 나타난 반면, 최상위 부유층의 부와 기업 이익은 크게 증가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코로나 19는 각국의 글로벌 리더들이 경각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불평등 해소 정책을 도입하기 위한 계기로 작용했어야 했다. 그러나 본 보고서에서 증명된 바와 같이, 일부 예외 사례를 제외하면 세계 각국 정부는 '일상적 불평등' *inequality as usual* 해결 측면에서 상당히 인색한 모습을 보였다.

2022년 현재, 코로나 19로부터의 회복은 새로운 위기로 인해 뒷전으로 밀려난 상황이며, 식품 및 에너지 가격 급등, 식량 불안 심화, 저소득 및 중소득국의 예산 및 부채 문제 등이 악화되고 있다. 부채 위기는 남반구 *Global South* 여러 국가에서 심각한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적절한 채무 조정의 부재로 인해 많은 국가가 어쩔 수 없이 긴축 정책을 취했으며, 그 결과 불평등 해소 관련 지출이 잠식되었다. 한편 기업들은, 특히 식품 및 에너지 부문에서 막대한 횡재이익을 창출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최상위 부유층이 보유한 부의 규모는 코로나 19 기간 중 크게 증가하였으나 이에 대한 추가적 세금 부과는 실질적으로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코로나 19에 이은 긴축 정책은 전 세계 시민들에게 가혹한 시련이 되고 있다. 세계 각국 정부는 국제금융기구와 글로벌 기금의 지원을 통해 불평등을 줄이고, 불경기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빈곤층의 소득 감소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정부 대상 제언: 폭발적 불평등 증가를 멈추고 방향성 전환

각국 정부는 불평등을 대폭 해소하기 위한 긴급 조치를 최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1. 국가 불평등 해소를 위한 행동계획 구축

긴축 조치를 거부하고, 불평등 해소를 위한 지출 증대, 조세제도의 누진성 확대, 노동자의 권리 및 소득 증진, 불평등 해소를 위한 노력 및 정책적 영향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는 등 최빈곤층 소득 증대에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러한 계획에는 다음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2. 조세 정책:

- 대기업 및 최상위 부유층 개인 대상 최고 소득세율 인상을 통해 법인소득세 및 개인소득세 제도의 누진성을 확대해야 한다.
- 대기업 및 개인 대상 면세, 세액 공제, 조세 혜택을 대폭 축소해야 한다.
- 최상위 부유층 개인을 대상으로 '연대세'를 도입해야 한다. 특히 현재 유가 및 식품 가격 상승으로 인해 횡재이익이 발생한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영구적 '횡재세' *windfall tax*를 부과해야 한다.
- 기본 식품을 부가가치세와 일반판매세 *GST*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면세 제외 등록 기준을 엄격하게 설정하여 빈곤층 부담을 감소시켜야 한다.
- 최상위 기업 및 개인을 대상으로 역외 자산이 세금 부과 대상에 포함되는 부유세를 도입해야 한다.
- 자본 소득, 부동산, 상속, 금융 거래 및 소득 등에 관한 기타 세금 부과율을 인상하고 누진성을 확대해야 한다.
- 유해조세제도 감소, 조세회피 방지 조치 강화를 통해 다국적 기업이 적정한 세금을 납부하도록 해야 한다.
- 글로벌 자산 레지스트리 *global asset registry* 시스템 도입, 역외 자산 보유에 관한 정보 교류 증진, 기업 활동에 관한 더욱 효율적인 국가 간 보고 활동을 통해 자산의 비공개성을 종식하여 국가 세무 당국의 세수 확보 역량을 강화하고, 불법적 자금 흐름을 차단해야 한다.

3. 공공서비스:

- 저소득국 및 중소득국이 ‘인천선언’ 목표에서 제시한 정부 예산 20%의 교육 지출을 실현하도록 하기 위해, 특히 최빈곤층을 위한 양질의 중등교육 제공에 초점을 둔 무료 공교육 지출 증대가 필요하다. 인천선언 *The Incheon Declaration* 은 2015년 세계교육포럼 WEF에서 모두를 위한 교육 기회 증진 조치로 채택되었다.
- 시민들에게 양질의 보건서비스 접근성을 제공하고, 향후 팬데믹 발생 시 시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공공 보건 지출의 대폭 확대가 필요하며, 특히 모두를 위한 포괄적 무료 일차의료서비스 *free comprehensive primary healthcare* 제공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 노동빈곤층, 아동, 장애인, 실업인구, 무급 돌봄노동자 및 기타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팬데믹과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더욱 포괄적인 시민 보호를 위해 연금 외의 보편적 사회보장 프로그램을 시행해야 한다.
- 교육 및 보건서비스 이용자의 비용 부담을 면제하여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공공서비스 정책을 민영화하는 대신 공공성을 증대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여 사회보장제도 당사자 부담금의 누진성을 확대하고 빈곤층의 부담을 감소시켜야 한다.
- 최빈곤층 및 취약계층 대상 지출 집중을 통해 중등교육, 보건서비스, 보편적 사회보장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한다.

4. 노동권 및 임금:

- 국제노동기구 협약을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법률 도입 및 수렴을 통해, 비공식, 공식, 무급 등 노동의 성격을 막론하고 노동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해야 한다.
- 남녀 동일임금, 차별 및 성희롱 금지와 관련한 여성 권리 보장법을 도입하고 이행을 강화해야 한다.
- 모든 국가에서 강간 방지 법률에 부부간격을 포함시키고, 폭력 행사의 입증이 아닌 동의의 부재를 강간의 근거로 정의하기 위한 입법 활동이 필요하다.
- 모든 성별을 대상으로 동일한 수준의 유급 육아휴직을 확대하여 국제노동기구 권고사항에 따라 최소 18 주간 휴직 전 임금의 100%가 지급되도록 하며, 가정에서 국가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문에서 남성과 여성 간의 무급 돌봄노동 시간과 비용 및 책임을 재분배해야 한다.
- 최저임금 인상률을 1인당 국내총생산 증가율 수준으로 우선 확대하며,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도록 매년 검토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최저임금 및 여성 권리 등 관련 노동법 집행을 위한 국가시스템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
- 비공식 부문에서도 노동 조건 및 급여에 관한 최소한의 규제 요구사항이 준수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 비공식 및 취약노동자와 이들의 소액보험을 사회보장제도에 점진적으로 포함시키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국제사회 대상 제언

각국 정부의 불평등 해소를 위해 국제사회는 다음 조치를 즉시 시행해야 한다.

1.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 제 10 번에 해당하는 소득 및 부의 불평등 감소를 실현하기 위해 주요 조세 지출 및 노동 정책 도입에 관한 글로벌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모든 국가가 2030년까지 가처분소득 기반 지니계수 0.25를 달성¹⁰할 수 있도록 정책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2.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은 모든 국가 프로그램 및 정책 자문 내용에 긴축을 피하고 불평등 해소에 초점을 맞추며, 조세, 공공서비스, 노동 정책을 통해 더 효과적인 불평등 해소를 위한 긴급 조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도록 촉구해야 한다.
3. 국제금융기구들이 제공하는 긴급 양허성 자금 *emergency concessional financing* 및 무조건적 자금을 개선하여 수혜국이 에너지 및 식품 가격 상승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또한 2021년 발행된 IMF 특별인출권 SDR이 부채 및 지원 조건을 최소화하는 방식을 통해 고소득 국가

에서 저소득 국가로 최대한 재배정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국제통화기금은 6,500억 달러의 특별인출권을 추가 발행하고 중점 지원 대상 저소득 및 중소득 국가들에게 재배정하여 이들의 누적적 지출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4. 모든 국가는 2023~24년 상환 기한이 도래하는 공공 및 민간 채권자에 대한 모든 채무액 탕감을 비롯한 포괄적 채무 완화를 실행하여, 각국이 채무 상환을 개선하고 보편적 의료서비스와 교육, 사회보장을 위한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실행할 수 있는 충분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 2030년까지 상대적 저소득국가와 모든 시민에게 사회보장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글로벌 기금 설립 등을 통해 저소득 국가 및 중저소득 국가에 대한 원조를 대폭 확대하고, 교육, 보건, 사회보장 관련 불평등 해소를 위한 지출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고소득 국가에서 자산, 소득, 금융거래, 탄소배출에 대한 연대세를 도입하고, 해당 세수 중 일부를 상대적 저소득 국가에 지원함으로써 원조 자금을 충당할 수 있을 것이다.

[별첨] 2022 불평등해소실천지표

Table A1: CRI 2022 Country/Region Ranking

Country/region	Public services ranking	Tax ranking	Labour ranking	CRI ranking
Norway	12	15	3	1
Germany	7	10	11	2
Australia	24	1	40	3
Belgium	8	26	9	4
Canada	28	5	26	5
Japan	4	19	29	6
Denmark	5	57	2	7
New Zealand	22	7	35	8
Slovenia	10	68	4	9
Finland	2	90	5	10
Czechia	13	52	8	11
France	3	70	14	12
Luxembourg	14	56	12	13
United Kingdom	15	34	37	14
Iceland	30	48	7	15
Estonia	25	42	17	16
Ireland	6	84	16	17
Israel	33	33	15	18
Austria	9	76	19	19
Sweden	11	103	6	20
Poland	1	129	21	21
Croatia	16	88	13	22
Portugal	23	69	24	23
Korea, Rep.	37	8	57	24
Slovakia	27	128	1	25
Belarus	26	28	56	26
South Africa	38	3	76	27
United States	18	74	45	28
Italy	20	71	41	29
Netherlands	19	109	23	30
Switzerland	32	99	25	31
Argentina	29	29	68	32
Latvia	40	73	27	33
Ukraine	21	100	44	34
Lithuania	31	107	32	35
Russian Federation	46	50	43	36
Malta	43	118	10	37
Chile	39	41	60	38
Spain	45	87	33	39
Maldives	71	12	54	40
Kiribati	78	6	62	41
Hungary	36	143	18	42
Seychelles	82	63	28	43
Kyrgyz Republic	58	31	63	44
Greece	17	149	39	45

Mongolia	56	23	81	46
Tajikistan	65	35	64	47
Namibia	34	20	106	48
Tunisia	83	24	65	49
China	52	4	111	50
Kazakhstan	41	122	55	51
Costa Rica	42	94	72	52
Cyprus	44	148	20	53
Jordan	99	65	36	54
Mauritius	55	106	48	55
Romania	61	139	22	56
Lesotho	91	2	103	57
Uruguay	49	124	52	58
El Salvador	94	43	59	59
Belize	95	38	61	60
Uzbekistan	35	49	108	61
Bulgaria	47	144	46	62
Moldova	62	142	30	63
Tuvalu	54	17	112	64
Azerbaijan	90	21	89	65
Mexico	50	86	87	66
Barbados	66	127	51	67
Cabo Verde	85	58	78	68
Guyana	73	126	50	69
Thailand	60	39	100	70
Bolivia	48	113	85	71
Georgia	53	72	90	72
Botswana	64	13	123	73
Türkiye	69	114	71	74
Ecuador	79	40	91	75
Albania	70	102	79	76
Brazil	51	112	84	77
Armenia	67	123	66	78
Singapore	80	132	53	79
Samoa	88	125	58	80
St. Vincent and the Grenadines	104	61	75	81
Antigua and Barbuda	84	145	42	82
Algeria	86	53	96	83
Paraguay	77	116	80	84
Malaysia	89	119	67	85
Hong Kong SAR, China	76	151	47	86
Egypt, Arab Rep.	111	80	70	87
St. Lucia	101	110	73	88
Trinidad and Tobago	72	140	69	89
Serbia	59	159	31	90
Morocco	120	22	97	91
Vietnam	102	37	104	92
Kenya	109	11	125	93
Cambodia	126	18	99	94
Peru	81	67	109	95

Fiji	68	137	82	96
Honduras	124	45	88	97
Occupied Palestinian Territory	75	158	38	98
Jamaica	92	105	95	99
Myanmar	141	79	74	100
Indonesia	112	44	105	101
Philippines	106	104	92	102
North Macedonia	63	161	34	103
Iran	57	130	115	104
Guatemala	118	108	83	105
Bahamas, The	74	160	49	106
Bangladesh	136	47	101	107
Solomon Islands	107	60	122	108
Zambia	117	14	139	109
Djibouti	130	9	135	110
Sri Lanka	128	85	93	111
Nepal	116	36	126	112
Dominican Republic	103	147	77	113
Sao Tome and Principe	98	117	107	114
Timor-Leste	110	111	102	115
Bhutan	114	27	140	116
Senegal	115	62	119	117
Togo	127	25	131	118
Malawi	142	75	98	119
Mozambique	113	59	128	120
Lebanon	108	150	86	121
Eswatini	96	134	114	122
India	129	16	151	123
Panama	93	154	94	124
Rwanda	135	46	132	125
Pakistan	151	77	113	126
Yemen, Rep.	152	66	120	127
Ghana	138	54	133	128
Mali	143	32	147	129
Tanzania	145	30	146	130
Angola	154	83	118	131
Gambia, The	131	101	127	132
Papua New Guinea	146	64	130	133
Tonga	87	141	138	134
Burkina Faso	123	78	143	135
Mauritania	134	131	116	136
Bahrain	97	146	129	137
Afghanistan	158	115	117	138
Zimbabwe	119	55	158	139
Vanuatu	100	155	121	140
Benin	122	97	149	141
Congo, Dem. Rep.	133	96	144	142
Lao PDR	144	95	141	143
Ethiopia	132	81	152	144
Burundi	121	93	157	145

Congo, Rep.	125	153	110	146
Oman	105	152	136	147
Cameroon	147	92	150	148
Niger	157	51	156	149
Chad	159	89	148	150
Guinea-Bissau	155	138	124	151
Uganda	150	91	154	152
Sierra Leone	137	120	153	153
Central African Republic	149	82	159	154
Cote d'Ivoire	140	133	145	155
Madagascar	148	136	137	156
Guinea	156	98	155	157
Haiti	153	135	134	158
Nigeria	160	121	161	159
Liberia	139	156	142	160
South Sudan	161	157	160	161

지역별 순위

아시아

지속적인 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아시아는 극심한 불평등의 위기를 직면하고 있다. 이는 성장을 저해하고 빈곤 퇴치를 방해한다. 코로나 19로 인해 빈곤에 허덕이는 아시아인의 수가 14억 명으로 늘어났고 불평등은 8% 증가했다.¹¹ 이와 동시에 아시아 억만장자들의 부는 1조 8천억 달러 증가했다.¹² 최상위 부유층 1%가 아시아 부의 25%가량을 소유하고 있다. 본 지표는 OECD 아시아 국가들이 불평등 감소에 있어 다른 아시아 국가들보다 뛰어나며, 그 뒤를 북아시아와 중앙아시아가 따르고, 남아시아는 뒤처져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¹³ 일부 저소득 국가(키르기스스탄, 몽골, 타지키스탄)는 불평등 해소 조치를 통해 불평등을 줄이는 것이 부의 문제가 아닌 정치적 선택임을 보여준다.

Table A2: East Asia and the Pacific

Country/region	Public services ranking	Tax ranking	Labour ranking	Regional CRI ranking
Australia	24	1	40	1
Japan	4	19	29	2
New Zealand	22	7	35	3
Korea, Rep.	37	8	57	4
Kiribati	78	6	62	5
Mongolia	56	23	81	6
China	52	4	111	7
Tuvalu	54	17	112	8
Thailand	60	39	100	9
Singapore	80	132	53	10
Samoa	88	125	58	11
Malaysia	89	119	67	12
Hong Kong SAR, China	76	151	47	13
Vietnam	102	37	104	14
Cambodia	126	18	99	15
Fiji	68	137	82	16

Myanmar	141	79	74	17
Indonesia	112	44	105	18
Philippines	106	104	92	19
Solomon Islands	107	60	122	20
Timor-Leste	110	111	102	21
Papua New Guinea	146	64	130	22
Tonga	87	141	138	23
Vanuatu	100	155	121	24
Lao PDR	144	95	141	25

Table A3: South Asia

Country	Public services ranking	Tax ranking	Labour ranking	Regional CRI ranking
Maldives	71	12	54	1
Bangladesh	136	47	101	2
Sri Lanka	128	85	93	3
Nepal	116	36	126	4
Bhutan	114	27	140	4
India	129	16	151	6
Pakistan	151	77	113	7
Afghanistan	158	115	117	8

유럽 및 중앙아시아

Table A4: Europe and Central Asia

Country	Public services ranking	Tax ranking	Labour ranking	Regional CRI ranking
Norway	12	15	3	1
Germany	7	10	11	2
Belgium	8	26	9	3
Denmark	5	57	2	4
Slovenia	10	68	4	5
Finland	2	90	5	6
Czechia	13	52	8	7
France	3	70	14	8
Luxembourg	14	56	12	9
United Kingdom	15	34	37	10
Iceland	30	48	7	11
Estonia	25	42	17	12
Ireland	6	84	16	13
Austria	9	76	19	14
Sweden	11	103	6	15
Poland	1	129	21	16
Croatia	16	88	13	17
Portugal	23	69	24	18
Slovakia	27	128	1	19
Belarus	26	28	56	20
Italy	20	71	41	21
Netherlands	19	109	23	22
Switzerland	32	99	25	23

Latvia	40	73	27	24
Ukraine	21	100	44	25
Lithuania	31	107	32	26
Russian Federation	46	50	43	27
Malta	43	118	10	28
Spain	45	87	33	29
Hungary	36	143	18	30
Kyrgyz Republic	58	31	63	31
Greece	17	149	39	32
Tajikistan	65	35	64	33
Kazakhstan	41	122	55	34
Cyprus	44	148	20	35
Romania	61	139	22	36
Uzbekistan	35	49	108	38
Bulgaria	47	144	46	39
Moldova	62	142	30	40
Azerbaijan	90	21	89	41
Georgia	53	72	90	42
Türkiye	69	114	71	43
Albania	70	102	79	44
Armenia	67	123	66	45
Serbia	59	159	31	46
North Macedonia	63	161	34	47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는 불평등이 매우 심각한 지역이다. 최상위 부유층 10%의 소득 점유율은 55.8%인 반면, 하위 50%의 소득 점유율은 9.1%에 불과하다. 이 지역은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한 10 개국 중 7 개국을 포함하며, 불평등해소실천지표의 최하위 10 개국도 모두 이곳에 위치한다. 특히 공공서비스, 괜찮은 일자리 *Decent Job*, 세금 징수 부문에서 부정적 성과를 내고 있다. 누진세 정책을 잘 시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회서비스의 지출과 적용범위는 매우 낮고, 높은 수준의 불안정한 고용과 극심한 임금 불평등 때문에 노동 부문 최하위 10 개국에 포함되기도 했다. 불평등 해소를 위한 강력한 조치가 없다면 2030 년까지 아프리카의 극심한 빈곤을 끝내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Table A5: Sub-Saharan Africa

Country	Public services ranking	Tax ranking	Labour ranking	Regional CRI ranking
South Africa	38	3	76	1
Seychelles	82	63	28	2
Namibia	34	20	106	3
Mauritius	55	106	48	4
Lesotho	91	2	103	5
Cabo Verde	85	58	78	6
Botswana	64	13	123	7
Kenya	109	11	125	8
Zambia	117	14	139	9
Sao Tome and Principe	98	117	107	10
Senegal	115	62	119	11
Togo	127	25	131	12

Malawi	142	75	98	13
Mozambique	113	59	128	14
Eswatini	96	134	114	15
Rwanda	135	46	132	16
Ghana	138	54	133	17
Mali	143	32	147	18
Tanzania	145	30	146	19
Angola	154	83	118	20
Gambia, The	131	101	127	21
Burkina Faso	123	78	143	22
Mauritania	134	131	116	23
Zimbabwe	119	55	158	24
Benin	122	97	149	25
Congo, Dem. Rep.	133	96	144	26
Ethiopia	132	81	152	27
Burundi	121	93	157	28
Congo, Rep.	125	153	110	29
Cameroon	147	92	150	30
Niger	157	51	156	31
Chad	159	89	148	32
Guinea-Bissau	155	138	124	33
Uganda	150	91	154	34
Sierra Leone	137	120	153	35
Central African Re- public	149	82	159	36
Cote d'Ivoire	140	133	145	37
Madagascar	148	136	137	38
Guinea	156	98	155	39
Nigeria	160	121	161	40
Liberia	139	156	142	41
South Sudan	161	157	160	42

중동 및 북아프리카

중동 및 북아프리카는 소득 불평등 측면에서 가장 열악한 지역이다. 2021년 상위 10%의 세전소득 비중은 58.1%인 반면 하위 50%의 소득 비중은 8.8%에 불과했다.¹⁴ 2011년 개혁의 물결에도 불구하고 불평등 감소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지역에서는 지난 10년 동안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극심한 빈곤이 증가했다.¹⁵ 시리아와 예멘에서는 대립이 계속되고 있으며, 코로나 19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더 취약한 상황에 놓였다.

본 지표에서 중동 및 북아프리카는 낮은 성과를 보였으나 국가 간 현저한 차이는 있었다. 세금 징수와 사회적 지출 지표가 낮았으며, 수십 년간의 부채, 긴축 및 역진적 조세제도로 수백만 명이 기본적인 서비스나 사회적 보호를 받지 못했다. 이곳 지역에서 사회적 지출은 보편적인 사회적 보호가 목적이 아니라, 현금 이전, 특정 대상 사회 지원, 소득 관련 사회보험 제도, 식량 및 연료 보조금 등을 목적으로 한다.¹⁶ 또한, 교육과 보건에 대한 낮은 수준의 공공 지출과 높은 수준의 보건 자기부담금이 특징적이다. 이는 최근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대두되었으며 미래 세대에 심각한 사회경제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을 위한 공간이 축소되고 국제노동조합연맹의 글로벌 권리 지수에 의해 노동자에게 최악의 지역으로 선정된 중동 및 북아프리카는 노동권 정책 부문에서 저조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¹⁷

Table A6: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Country/region	Public services ranking	Tax ranking	Labour ranking	Regional CRI ranking
Tunisia	83	24	65	1
Jordan	99	65	36	2
Algeria	86	53	96	3
Egypt, Arab Rep.	111	80	70	4
Morocco	120	22	97	5
Occupied Palestinian Territory	75	158	38	6
Iran	57	130	115	7
Djibouti	130	9	135	8
Lebanon	108	150	86	9
Yemen, Rep.	152	66	120	10
Bahrain	97	146	129	11
Oman	105	152	136	12

중남미

중남미 지역은 코로나 19 팬데믹과 생계비 위기에도 불구하고 25%만이 점진적으로 사회적 지출을 확대했다. 그러나 이중 많은 국가들이 중남미 지역의 대부분 국가와 마찬가지로 이미 긴축 정책으로 전환했다. 중남미 지역에서는 비공식 고용, 취약한 노동권, 불공정 임금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노동 부문에서 개선을 보인 국가도 33%에 불과했다. 그러나 불평등 해소를 위해 노력을 보인 국가들이 입증한 바와 같이 회복을 위한 대안은 있다. 16%의 중남미 국가가 보여준 조치와 같이 누진적 세제를 채택하고, 새로운 부유세와 횡재세를 도입한다면 아직 기회는 있다.

Table A7: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Country	Public services ranking	Tax ranking	Labour ranking	Regional CRI ranking
Argentina	29	29	68	1
Chile	39	41	60	2
Costa Rica	42	94	72	3
Uruguay	49	124	52	4
El Salvador	94	43	59	5
Belize	95	38	61	6
Mexico	50	86	87	7
Barbados	66	127	51	8
Guyana	73	126	50	9
Bolivia	48	113	85	10
Ecuador	79	40	91	11
Brazil	51	112	84	12
St. Vincent and the Grenadines	104	61	75	13
Antigua and Barbuda	84	145	42	14
Paraguay	77	116	80	15
St. Lucia	101	110	73	16
Trinidad and Tobago	72	140	69	17
Peru	81	67	109	18
Honduras	124	45	88	19

Jamaica	92	105	95	20
Guatemala	118	108	83	21
Bahamas, The	74	160	49	22
Dominican Republic	103	147	77	23
Panama	93	154	94	24
Haiti	153	135	134	25

OECD 국가

Table A8: OECD

Country	Public services ranking	Tax ranking	Labour ranking	OECD CRI ranking
Norway	12	15	3	1
Germany	7	10	11	2
Australia	24	1	40	3
Belgium	8	26	9	4
Canada	28	5	26	5
Japan	4	19	29	6
Denmark	5	57	2	7
New Zealand	22	7	35	8
Slovenia	10	68	4	9
Finland	2	90	5	10
Czechia	13	52	8	11
France	3	70	14	12
Luxembourg	14	56	12	13
United Kingdom	15	34	37	14
Iceland	30	48	7	15
Estonia	25	42	17	16
Ireland	6	84	16	17
Israel	33	33	15	18
Austria	9	76	19	19
Sweden	11	103	6	20
Poland	1	129	21	21
Portugal	23	69	24	22
Korea, Rep.	37	8	57	23
Slovakia	27	128	1	24
United States	18	74	45	25
Italy	20	71	41	26
Netherlands	19	109	23	27
Switzerland	32	99	25	28
Latvia	40	73	27	29
Chile	39	41	60	30
Spain	45	87	33	31
Hungary	36	143	18	32
Greece	17	149	39	33
Costa Rica	42	94	72	34
Mexico	50	86	87	35
Türkiye	69	114	71	36

소득집단별 순위

OECD 국가의 경제적 불평등은 수년간 축소된 이후 최근 30 년 동안 증가하고 있다. 소득 불평등은 지난 반세기 동안 가장 높은 수준이며, 최상위 부유층 10%의 소득은 하위 10%보다 10 배 이상 높다.

불평등해소실천지표 상위 10 개국은 모두 부유한 OECD 회원국으로, 이들은 2 차 세계대전 이후 발전한 강력한 복지 국가이다. 사회서비스에 대한 지출은 부유한 기업과 세금을 낼 수 있는 인구가 많기 때문에 매우 높다. 또한 대부분의 노동자가 공식 노동자로 일하기 때문에 노동권 보장에 있어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불평등을 줄이는 데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

Table A9

Low-income countries	Public services ranking	Tax ranking	Labour ranking	Global Rank	Rank by income
Togo	127	25	131	118	1
Malawi	142	75	98	119	2
Mozambique	113	59	128	120	3
Rwanda	135	46	132	125	4
Yemen, Rep.	152	66	120	127	5
Mali	143	32	147	129	6
Gambia, The	131	101	127	132	7
Burkina Faso	123	78	143	135	8
Afghanistan	158	115	117	138	9
Congo, Dem. Rep.	133	96	144	142	10
Ethiopia	132	81	152	144	11
Burundi	121	93	157	145	12
Niger	157	51	156	149	13
Chad	159	89	148	150	14
Guinea-Bissau	155	138	124	151	15
Uganda	150	91	154	152	16
Sierra Leone	137	120	153	153	17
Central African Republic	149	82	159	154	18
Madagascar	148	136	137	156	19
Guinea	156	98	155	157	20
Liberia	139	156	142	160	21
South Sudan	161	157	160	161	22

Lower-middle-income countries	Public services ranking	Tax ranking	Labour ranking	Sum of CRI ranking	Rank by income
Ukraine	21	100	44	34	1
Kiribati	78	6	62	41	2
Kyrgyz Republic	58	31	63	44	3
Mongolia	56	23	81	46	4
Tajikistan	65	35	64	47	5
Tunisia	83	24	65	49	6
Lesotho	91	2	103	57	7
El Salvador	94	43	59	59	8
Belize	95	38	61	60	9
Uzbekistan	35	49	108	61	10
Cabo Verde	85	58	78	68	11
Bolivia	48	113	85	71	12

Samoa	88	125	58	80	13
Algeria	86	53	96	83	14
Egypt, Arab Rep.	111	80	70	87	15
Morocco	120	22	97	91	16
Vietnam	102	37	104	92	17
Kenya	109	11	125	93	18
Cambodia	126	18	99	94	19
Honduras	124	45	88	97	20
Occupied Palestinian Territory	75	158	38	98	21
Myanmar	141	79	74	100	22
Indonesia	112	44	105	101	23
Philippines	106	104	92	102	24
Iran	57	130	115	104	25
Bangladesh	136	47	101	107	26
Solomon Islands	107	60	122	108	27
Zambia	117	14	139	109	28
Djibouti	130	9	135	110	29
Sri Lanka	128	85	93	111	30
Nepal	116	36	126	112	31
Sao Tome and Principe	98	117	107	114	32
Timor-Leste	110	111	102	115	33
Bhutan	114	27	140	116	34
Senegal	115	62	119	117	35
Eswatini	96	134	114	122	36
India	129	16	151	123	37
Pakistan	151	77	113	126	38
Ghana	138	54	133	128	39
Tanzania	145	30	146	130	40
Angola	154	83	118	131	41
Papua New Guinea	146	64	130	133	42
Mauritania	134	131	116	136	43
Zimbabwe	119	55	158	139	44
Vanuatu	100	155	121	140	45
Benin	122	97	149	141	46
Lao PDR	144	95	141	143	47
Congo, Rep.	125	153	110	146	48
Cameroon	147	92	150	148	49
Cote d'Ivoire	140	133	145	155	50
Haiti	153	135	134	158	51
Nigeria	160	121	161	159	52
Upper-Middle-Income Countries	Public services ranking	Tax ranking	Labour ranking	Sum of CRI ranking	Rank by income
Belarus	26	28	56	26	1
South Africa	38	3	76	27	2
Argentina	29	29	68	32	3
Russian Federation	46	50	43	36	4
Maldives	71	12	54	40	5
Namibia	34	20	106	48	6
China	52	4	111	50	7

Kazakhstan	41	122	55	51	8
Costa Rica	42	94	72	52	9
Jordan	99	65	36	54	10
Mauritius	55	106	48	55	11
Romania	61	139	22	56	12
Bulgaria	47	144	46	62	13
Moldova	62	142	30	63	14
Tuvalu	54	17	112	64	15
Azerbaijan	90	21	89	65	16
Mexico	50	86	87	66	17
Guyana	73	126	50	69	18
Thailand	60	39	100	70	19
Georgia	53	72	90	72	20
Botswana	64	13	123	73	21
Türkiye	69	114	71	74	22
Ecuador	79	40	91	75	23
Albania	70	102	79	76	24
Brazil	51	112	84	77	25
Armenia	67	123	66	78	26
St. Vincent and the Grenadines	104	61	75	81	27
Paraguay	77	116	80	84	28
Malaysia	89	119	67	85	29
St. Lucia	101	110	73	88	30
Serbia	59	159	31	90	31
Peru	81	67	109	95	32
Fiji	68	137	82	96	33
Jamaica	92	105	95	99	34
North Macedonia	63	161	34	103	35
Guatemala	118	108	83	105	36
Dominican Republic	103	147	77	113	37
Lebanon	108	150	86	121	38
Panama	93	154	94	124	39
Tonga	87	141	138	134	40

	Public services ranking	Tax ranking	Labour ranking	Sum of CRI ranking	Rank by income
High-Income countries					
Norway	12	15	3	1	1
Germany	7	10	11	2	2
Australia	24	1	40	3	3
Belgium	8	26	9	4	4
Canada	28	5	26	5	5
Japan	4	19	29	6	6
Denmark	5	57	2	7	7
New Zealand	22	7	35	8	8
Slovenia	10	68	4	9	9
Finland	2	90	5	10	10
Czechia	13	52	8	11	11
France	3	70	14	12	12
Luxembourg	14	56	12	13	13
United Kingdom	15	34	37	14	14

Iceland	30	48	7	15	15
Estonia	25	42	17	16	16
Ireland	6	84	16	17	17
Israel	33	33	15	18	18
Austria	9	76	19	19	19
Sweden	11	103	6	20	20
Poland	1	129	21	21	21
Croatia	16	88	13	22	22
Portugal	23	69	24	23	23
Korea, Rep.	37	8	57	24	24
Slovakia	27	128	1	25	25
United States	18	74	45	28	26
Italy	20	71	41	29	27
Netherlands	19	109	23	30	28
Switzerland	32	99	25	31	29
Latvia	40	73	27	33	30
Lithuania	31	107	32	35	31
Malta	43	118	10	37	32
Chile	39	41	60	38	33
Spain	45	87	33	39	34
Hungary	36	143	18	42	35
Seychelles	82	63	28	43	36
Greece	17	149	39	45	37
Cyprus	44	148	20	53	38
Uruguay	49	124	52	58	39
Barbados	66	127	51	67	40
Singapore	80	132	53	79	41
Antigua and Barbuda	84	145	42	82	42
Hong Kong SAR, China	76	151	47	86	43
Trinidad and Tobago	72	140	69	89	44
Bahamas, The	74	160	49	106	45
Bahrain	97	146	129	137	46
Oman	105	152	136	147	47

NOTES

- ¹ Oxfam. (January 2022). *Inequality Virus*. <https://www.oxfam.org/en/research/inequality-virus#:~:text=The%20virus%20has%20exposed%2C%20fed,individuals%20and%20corporations%20%E2%80%93%20are%20thriving>
- ² Iran, Kiribati, Tonga and Tuvalu have been added to the list of countries covered since 2020. The full global and regional rankings are shown in the Annex, and are available in more detail at www.inequalityindex.org.
- ³ For a full discussion of the evidence that action in these three areas has a large bearing on inequality, see the Commitment to Reducing Inequality Index 2018 report. <https://www.oxfam.org/en/research/commitment-reducing-inequality-index-2018>
- ⁴ For details of the methodology, see the index methodology note
- ⁵ The rises for Mauritius, Morocco and Singapore largely reflected reductions in their tax-haven-like behaviour rather than domestic policy changes.
- ⁶ Reuters. (25 March 2022). Ghana announces sweeping spending cuts to tackle deficit. <https://www.reuters.com/world/africa/ghana-announces-sweeping-spending-cuts-tackle-deficit-2022-03-25/>
- ⁷ Oxfam and DFI (October 2022). The Commitment to Reducing Inequality Index.
- ILO. (2022). World Social Protection Report 2020-22 <https://www.social-protection.org/gimi/ShowWiki.action?id=629#stat>.
- ⁸ Ukraine Rapid Damage and Needs Assessment. (Aug 2022). https://documents1.worldbank.org/curated/en/099445209072239810/pdf/P17884304837910630b9c6040ac12428d5c.pdf?utm_source=substack&utm_medium=email
- ⁹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 definition of 'vulnerable employment' is used as an indicator for workers not covered by labour rights. This is typically tied to 'family workers' and 'own account workers' – based on the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Status in Employment (ICSE) – including both informal and non-contractual workers. See methodology note for more information. This is the best cross-country data set on workers who are not entitled to employment rights.
- ¹⁰ As the UN has been doing in its SDG Progress Report – see https://unstats.un.org/sdgs/report/2022/Progress_Chart_Technical_Note_2022.pdf, pages 33–35.
- ¹¹ World Bank (2022), Global Economic Prospects, January. This is calculated based on an average increase in the Gini coefficient of disposable income of 0.03, which represents 8% of average national pre-COVID inequality in Asia
- ¹² <https://patrioticmillionaires.org/wp-content/uploads/Annual-Wealth-Tax-Factsheet.pdf>
- ¹³ Throughout this report, the regions referred to cover the following countries (unless data are not available for a particular indicator): North and Central Asia – China, Hong Kong SAR China, Kazakhstan, Kyrgyz Republic, Mongolia, Tajikistan, Turkmenistan, Uzbekistan; OECD countries – Australia, Korea, Japan and New Zealand; Pacific – Fiji, Kiribati, Marshall Islands, Micronesia, Papua New Guinea, Samoa, Solomon Islands, Tonga, Tuvalu, Vanuatu; South Asia – Afghanistan, Bangladesh, Bhutan, India, Maldives, Nepal, Pakistan and Sri Lanka; Southeast Asia – ASEAN members (Brunei, Cambodia, Indonesia, Lao PDR, Malaysia, Myanmar Philippines, Singapore, Thailand and Vietnam) plus Timor-Leste
- ¹⁴ World Inequality Database (2021). <https://wid.world/>
- ¹⁵ World Bank estimates show a constant rise in extreme poverty in the MENA region between 2013 and 2020: R. Andres Castaneda Aguilar, T. Fujs, C. Lakner, D. Gerszon Mahler, M. Cong Nguyen, M. Schoch and M. Viveros. (2021, March 16). March 2021 Global Poverty Update. Washington DC: World Bank. Retrieved 18 October 2021, from: <https://blogs.worldbank.org/opendata/march-2021-global-poverty-update-world-bank>
- ¹⁶ R. Jawad. (2015). Social Protection and Social Policy Systems in the MENA Region: Emerging trends. New York: UN Department for Economic and Social Affairs (UNDESA). Retrieved 18 October 2021, from <https://www.un.org/esa/socdev/csocd/2016/RJawad-MENA.pdf>
- ¹⁷ Global Rights Index. (2022).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Retrieved 21 September 2022, from <https://www.globalrightsindex.org/en/2021/regions/middle-east>

불평등해소실천지표에 관한 추가 정보, 전 세계 불평등 해소를 위해 실천 방안, 본 보고서의 근거 자료 및 방법론은 <http://www.inequalityindex.org>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보고서에 관한 추가 정보 및 의견은 아래의 이메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matthew.martin@dri.org.uk, max.lawson@oxfam.org

© Development Finance International and Oxfam International October 2022

본 보고서는 저작권에 의해 보호를 받습니다. 단, 옹호활동, 캠페인, 교육 및 연구 목적으로 이용할 경우 원본의 출처를 밝히고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기 목적으로 본 보고서를 이용하는 경우, 영향 평가를 위해 사용의 목적을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외의 목적으로 본 보고서를 복사하거나, 타 출판물 내에 재사용, 또는 번역 및 각색하는 경우, 저작권자의 승인이 필요하며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관련 문의 policyandpractice@oxfam.org.uk

본 출판물에 포함된 정보는 인쇄 시점 기준으로 정확합니다.

Published by Oxfam GB for DFI and Oxfam International under

ISBN 978-1-78748-957-8

DOI: 10.21201/2022.9325

Oxfam GB, Oxfam House, John Smith Drive, Cowley, Oxford, OX4 2JY, UK.

표지 사진: 스리랑카 콜롬보 지역의 해안가 건물들. 지난 10년 동안 스리랑카의 경제적 불평등은 증가해 왔으며 현재 국가적, 경제적, 정치적 혼란 상황에 놓여 있다. 스리랑카의 불평등해소실천지표 결과는 지난 조사 대비 17계단 하락했고,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기업과 최상위 부유층에 대한 세금을 인하했다. © NAZLY AHMED ON FLICKR. LICENSED UNDER CC BY-NC-SA 2.0.

DEVELOPMENT FINANCE INTERNATIONAL

국제개발금융(DFI)은 역량 강화, 옹호활동, 자문 및 연구를 진행하는 비영리 단체로서, 전 세계 50개국 이상의 정부, 국제기구, 시민단체와 협력하여 개발금융이 빈곤과 불평등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www.development-finance.org 또는 www.governmentspendingwatch.org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OXFAM

옥스팜(Oxfam)은 빈곤으로부터 자유로운 미래를 만들기 위한 변화를 이끄는 글로벌 운동의 일환으로, 90개국 이상에서 활동하고 있는 21개 조직의 국제적인 연합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www.oxfam.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